

野 “사법부 체계 파괴 용납 안 돼...민주주의에 대한 도발”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여야 온도차 ... 국민의힘 “경찰에도 책임” 최상목 대행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행은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했다.

여야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빔은 폭력 사태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현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가두에서 고생하시는 애국 시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취지의 서한을 또 냈다. 이런 게 다 선동하는 행위들”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역시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고 비난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이번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치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법원 난입 전담팀 수사...“주요 가담자 구속”

검찰이 19일 새벽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정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연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고 밝혔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법원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신속 대책 수립”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청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입 시위대에 엄중한 법의 심판...“일벌백계” 목소리

공용물건손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적용 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피운 시위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구성된 시위대 수백여명이 법원 시설물을 부수고 저지하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도.

검·경은 이날 시위대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시위대에게는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심야에 집단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특수건조

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범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을 다치게 한 이들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소요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요죄가 적용되면 1

~10년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쳐들어가 위력을 행사한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검·경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일벌백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의 대처가 안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속영장 발부 전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을 한 건조물 침입행위 혐의 등으로 불합한 인원만 40명에 달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따른 집단적 위력행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